

전남 국립 의대 유치전, 단일화된 안으로 힘 실어야

정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전남권 의대 설립 마지막 기회
순천·목포 '소지역주의' 넘어 도민 의사 결집해 유치전 나서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전남 핵심 현안인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 입지를 일원화해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천·목포로 나눠 '자기 지역 유치'를 내세울 경우 자칫 소지역주의로 흘러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입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치전에 나서는 데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면 지역의 단일안을 도출해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 참석,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 중앙과 지역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정부에 통합 신청하는 방안까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목포대, 순천대 도민의 의사가 한 곳으로 모이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입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서부권의 치열한 유치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만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요지부동인 의대 정원 증원을 공식화하면서도 국립의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방법론'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는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여지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일어난다.

여러 지역에서 분출되는 의견을 단일안으로 마련한 뒤 '전남권 의대' 설립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서부권의 경우 목포대가 동부권에

서는 순천대가 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도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순천과 목포에서 잇따라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김원이(민주·목포) 의원과 소병철(민주·순천 갑) 의원이 각각 법률안을 내거나 서울 용산과 국회에서 삭발하는 등 목포와 순천이 치열하게 맞붙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여수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주장하며, 전남권 의대 유치와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형편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국민 성명 등으로 발표해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포함되도록 하자"며 "전남이 국립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갖고 모든 간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화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단일안을 마련해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단일화된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입지 선정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국민의 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어 향후 대응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내 정부의 국립 의대 전남 설립을 확정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을 꾸리고, '의과대학 민간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토론회, 대정부 건의 활동, 시민단체, 타 지역과 연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 시설에서만 생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

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5·18 당시 모습으로 ...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시작

24일 옛 전남도청 별관과 본관을 잇는 철재 빔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공사비 383억원, 전시콘텐츠 제작 사업비 113억원을 들여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 도청 회의실, 상무관, 전남도경찰국 본관·민원실 등 6개 동을 광주항쟁 당시인 1980년 모습으로 되돌리고 전시 콘텐츠를 채워넣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공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또 뚫린 동해 NLL 경계

北주민 탐승 선박 월선 민간신고 때까지 찾지 못해

남북 간 해상분계선인 동해 북방한계선(NLL) 감시·경계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24일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탐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측 민간 어선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선박은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인원 4명이 동해상을 통해 (NLL을) 월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정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목선이 동해 NLL 넘어오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새벽 4시 이전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포착하고 동해상에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청년 노리는 부동산 미끼 광고 판친다 ▶6면

손흥민 1골·1도움 워맨쇼...토티넘 선두 ▶18면

ART 투어리즘 - 강원도 강릉·양구 ▶22면

선박을 특정하지 못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속초 동쪽 해상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40~50km 떨어진 지점이다.

북한군이 이날 새벽 동해상에서 어떤 움직임을 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민 탈북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 NLL 감시·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 나타나는 지적이 나오자, 군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동해상의 '의심 선박'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로 포착하고 새벽 5시 30분께부터 작전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weeks
고함양 고강도 레티놀이 분기당
잠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대상) 2019.08.16-10.17 8주간(1)피부임상실험(2)실험자
고려사항(3) 080-023-5454 | www.iope.com